

더 빠르게, 더 멀리 자율주행차가 달려갑니다.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본격 개막

국토교통부, 2025. 3. 4.(화)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3월 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km)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3월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민관 공동위원장)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km)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 등 심의(現 18인으로 구성)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限 국토부 직권지정) 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도로연장 및 규모

구분	현행	변경
고속도로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구간 332.3km 및 분기점·나들목·부대시설 연결도로	고속도로 전체 44개 노선 5,224km 및 분기점·나들목·부대시설 연결도로
일반도로	6개 IC~물류시설 연결도로 25.7km	19개 IC~물류시설 연결도로 143km
총합	358km	5,367km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 시행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하였다.

* (기존) 60일간의 화물 적재량(톤)을 기재한 사전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 허가
 (개정) ①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운행기간(60일 이상)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 ②택배 등 불특정화물은 적재량(톤) 측정이 불가하므로 화물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

또한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km)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으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교통부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 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 신청예정 기업

구분	마스오토	라이드플렉스
차량		
운행예정 대수	현대 파비스 5대(3월 신청 예정)	타타대우 맥센 2대(5월 신청 예정)
최대 적재량	11.5톤	25톤

당신의 도시가 똑똑해집니다.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2025. 3. 14.(금)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발굴·실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탄소중립, 기후재해-zero 용·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용·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세부 유형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3개소 이내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솔루션을 소도시에 보급하여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보급 솔루션과 함께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방자치단체의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시·군·구)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5개소 이내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1년간 국비 12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는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규제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실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디바이스(On-Device) AI 서비스 실증 확산사업'과 협업으로 진행하여, AI 반도체를 활용한 모빌리티, 로봇 등 특화분야 스마트서비스의 도시공간 실증 활성화가 기대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1개소를 선정하고, 사업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에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

4가지 사업 유형 중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 개요

구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선정 지자체 수	1개소	3개소 이내	5개소 이내	1개소
사업목적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	중소도시가 기후위기, 지역 소멸 등 환경변화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 조성	우수한 스마트 솔루션을 소도시에 집중 보급하여 서비스 여건 개선 및 디지털 격차 완화	도시여건을 반영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 환경 구축을 통해 민간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
세부유형	단일 유형	· 기후위기 대응형 · 지역소멸 대응형	단일 유형	단일 유형
지원대상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인구 100만 이하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추진체계	지자체 주관, 기업 등 공동 참여	지자체 주관, 기업 등 공동 참여	지자체 단독	지자체 주관, 기업 등 공동 참여
사업기간	3년 ('25~'27년)	3년 ('25~'27년)	1년 ('25년)	3년 ('25~'27년)
국비 지원규모	최대 160억원	최대 80억원	12억원	최대 80억원
사업비	320억원 (국비+지방비)	160억원 (국비+지방비)	24억원 (국비+지방비)	160억원 (국비+지방비)
공모 신청서 접수기간	'25.5.19.(월) ~ 5.21.(수)	'25.5.19.(월) ~ 5.21.(수)	'25.4.14(월) ~ 4.16(수)	'25.5.19.(월) ~ 5.21.(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이며, 4개 사업유형 공모에 중복 응모 불가

디지털 혁신 시대 그리기 2025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국토교통부, 2025. 3. 23.(일)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25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17~'21)과 한국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12~'21)을 통합 개최('22년~)해 오고 있다.

그간 경진대회는 '12년 이후 총 135건의 수상작 중 18건의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용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25년 경진대회 개요

올해는 '데이터로 도약하는 스마트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응모 분야는 ①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②제품서비스 개발(시제품으로 응모) 2개 주제로 진행하며, 국토·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7월 중에 총 9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3,100만원 규모이다. 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 우수상 7팀과 특별상 1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 참여('25.9월 예정)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일정

